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의 공(功)과 과(過)

목 차

■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의 공(功)과 과(過)

Executive Summary	i
1.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이하는 한국 경제	1
2. 공(功) : 양적 성장	2
3. 과(過) : 구조적 취약성	6
4. 시사점	19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동 향 분 석 팀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의 공(功)과 과(過)

■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이하는 한국 경제

1997년 외환위기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었던 고비용·저효율, 정경유착, 기업의 무리한 외형 확장 등이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발생했다. 그 결과 한국은 최대폭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으며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자살자가 급증하는 등 경제적 및 사회적 피해가 극심했다. 그 후 20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둘 만큼 성장한 한국 경제를 되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공(功) : 양적 성장

(양적 성장) 한국 경제는 20년간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 모두 규모가 확대되었다. 2000년대 초반의 IT 호황, 중반의 신흥국 경제의 고성장 수혜를 입으며 GDP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교역 측면에서 2011년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클럽에 가입했다. 금융 부문도 가계대출 수요 증가 및 금융 회사들의 자산 확대 경쟁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거시건전성 개선)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상승세이지만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품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면서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2014년부터는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외채 의존도가 하락하는 등 대외 채무의 구조도 개선되었다. 특히 IMF 이전 300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고는 12배 이상 증가하여 대외 지불 능력이 대폭 개선되었다.

(금융 산업의 건전성 개선) 2000년대 중반 이후 바젤 II·III 로 이어진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자본적정성이 개선되었고 은행의 외화 및 원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

■ 과(過) : 구조적 취약성

(한계에 봉착한 양적 성장)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 세계 대비 한국의 GDP 규모는 2%대에서 정체중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진전에 따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투입의 둔화를 야기하고 있다. 자본스톡 역시 인구 고령화 등에 의한 저축률 하락과 주력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의한 성장성 및 수익성 둔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선진 과학 기술을 잘 따라하는 방식의 R&D 투자가 효과를 거뒀지만, 기초 부문 및 미지의 영역에서 꾸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한계점을 넘어서는 프론티어 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취약해진 가계 경제) 저소득 지속 및 양극화 심화 등 가계 경제는 취약해졌다. 가계 부문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 소득이 소비 지출보다 더디게 증가하는 점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이 늘고 연금 지출 부담도 늘어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 소득

보다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늘어 소비지출 여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 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한 순이자소득이 감소하는 등 가계 경제는 부채의 덩어리에 빠진 형국이다. 또한 사교육비 등 가계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몫이 커지면서 저축 및 실생활 용도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간 소득 분배 불균형이 확대되었고,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가계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활력이 떨어진 투자) 저성장 진입 및 보수적인 투자 행태 등으로 고정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투자 부문 증가율은 2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GDP에서 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었다. 이는 대내외 수요 부진 및 저성장 진입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며 투자 유인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는 내실 경영과 보수적인 투자 행태가 확산된 점도 투자 둔화를 야기했다.

(열악해진 고용 여건)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커졌으며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은 열악해졌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노동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고용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확대되는 등 기업 규모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 실업률보다 낮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높아졌고, 상승폭도 더 커졌다. 또한 대졸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자리와 학력간 미스매치가 심화되었다. **가계 경제 취약, 투자 활력 저하 및 고용 여건 악화 등 국내 내수 기반은 부실화가 심화되었다.**

(높아진 수출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축소되었고 주요 수출품 및 수출 시장은 20년 전과 대동소이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져 한국 경제 흐름이 대외 경기 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수출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소비 및 투자보다 낮고 20년간 하락폭은 더 크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생산 과정에서 수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몫이 확대되었다. 주력 수출품 및 수출 시장은 과거 20여년간 큰 변화가 없고 의존도가 높아져 이들 산업의 업황과 수출 대상 국가들의 경기 등락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불안정하고 실물 지원 미흡한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은 확대되었고 은행산업의 경쟁력 및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의 연결 고리는 약화되었다. 원화 환율의 변동성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아시아 신흥국보다 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확대되어 아시아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보다 더 커졌다. 이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이 많지만 아직까지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규모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 비율도 주요 신흥국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이다. 국내 은행은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세 둔화 및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은행 사업 구조

가 예대 업무를 주로 하는 특성상 실물 경제 둔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을 경험했던 국내 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가계대출을 확대한 이유도 있다. 또한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도 축소하는 등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의 연결 고리가 약화되었다.

■ 시사점

새로운 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역동적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판 회복 노력과 경제 구조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인 자본 축적,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 국내 산업 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을 전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기업의 창조적인 활동을 도와야 한다.

둘째, 가계 부문의 저소득·고비용 구조 탈피, 고용시장 내 취약 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소비 활성화 정책의 발상 전환 등을 통해 내수 소비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주거비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가 실질적으로 살아나게 해야 한다. 실업 안전망 확대, 비정규직·정규직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확대 등 취업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지속, R&D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부문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개방·융합·혁신형 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을 지속하여 성장의 주체인 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규제 부문의 선진화, 네거티브 규제로의 신속한 전환, 산업 정책의 유연화 등을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전통 제조 부문에서의 자본 축적 지속, 기술 혁신 과정의 유연성 제고, 기술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 트렌드에 맞는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제고 및 수출 시장 다변화 지속 등을 통해 부가가치 중심 무역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및 품질 경쟁력에 포커스를 둔 중간재 개발을 통해 수출이 증가해도 중간재 수입에 따르는 부가가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확대되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공략 지속, 성장 잠재력이 커지는 신흥 개도국으로의 진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째, 금융 부문의 핵심 역량 배양, 민간 서민금융 선순환 구조 강화 등의 금융의 경쟁력 강화 및 실물 경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여 경제 내에서 금융소외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1.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이하는 한국 경제

-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약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실행하게 되는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
 - 1997년의 외환위기는 당시 누적되었던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정경유착에 더해 무리한 기업 외형 확장 추진, 동남아 외환위기의 전염 및 정부의 미숙한 정책 대응 등의 결과로 발생¹⁾
 -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는 고금리·고임금·고지가·고물류 비용의 고비용 현상과 함께 국제 경쟁력 약화 및 기업의 수익력 저하의 저효율 현상이 일반화
 - 시장의 규율보다는 정경유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위험을 정부가 떠맡게 되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
 - 당시 교역·직접투자 등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 측면에서도 한국과 교류가 많았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염됨
 - 위기 조짐이 짙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약해졌지만 정부는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달러화를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소진됨
 - 당시 한국은 실물 경제, 금융시장 등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음
 - 한국 경제는 오일 쇼크로 1980년 역성장을 한 이래(1980년 -1.7%) 두 번째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1998년 -5.5%)
 - 1997년 상반기 840~89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1997년 12월 24일 1,965원까지 급등
 - 1997년 상반기 2.8%였던 실업률은 1998년 상반기 6.4%로, 같은 기간 동안 15~29세 청년실업률은 6.4%에서 11.4%로 급등
 - 당시 자살자수(10만명 당)는 1997년 13.1명에서 1998년 18.4명으로 40.5%가 증가했으며, 이 증가율은 통계DB로 구축되어 있는 1983년 이래 최근까지 최고치
- 20년간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두며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경제를 되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현대경제연구원, 1998년 11월, 'IMF 시대 1년의 평가와 과제'. | 이규성, 2006년, 『한국의 외환위기 : 발생·극복·그 이후』, 박영사.

2. 공(功) : 양적 성장

○ (양적 성장) 실물 경제 및 금융 부문 모두 규모 확대

- 외환위기 충격 이후 2000년대 초반의 IT 호황, 중반의 세계 경제 동반 성장세 확대 및 신흥국 경제의 고성장 수혜를 입으며 경제 규모가 확대
 -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명목GDP는 2.5배, 1인당 GDP는 2.2배, 상품 수출액은 4.0배 증가
 - 특히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무역액은 2011년 1조 796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클럽²⁾에 가입
- 2000년대 이후 가계대출 수요 증가 및 금융 회사들의 자산 확대 경쟁 등에 힘입어 금융 부문도 빠르게 성장
 -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금융자산은 8.3배,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0.7배, 채권상장잔액은 12.7배 증가
 - 일반적으로 금융 산업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³⁾은 1995년의 4.3에서 2016년 9.4로 상승

< 실물 경제의 양적 성장 >

구 분	1995년	2016년	증가폭
GDP (억 달러)	5,564	14,110	2.5배
1인당 GDP (달러)	12,340	27,535	2.2배
상품 수출 (억 달러)	1,251	4,954	4.0배

자료 : IMF, 한국무역협회.
주 : 명목 자료 기준.

< 금융 부문의 양적 성장 >

구 분	1995년	2016년	증가폭
금융자산 (조 원)	1,852	15,439	8.3배
주식시장 시가총액 (조 원)	141	1,510	10.7배
채권상장잔액 (조 원)	126	1,598	12.7배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6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코스닥 포함.

2) 이전까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로 중국을 제외하면 1인당 GNP가 4만 달러를 넘는 국가임.

3) 국민총소득(GNI) 대비 금융자산 비율.

○ (거시건전성 개선) 재정 건전성 유지, 경상수지 흑자 기초 정착, 대외 채무구조 개선 및 외환보유고 확대

-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정부부채는 증가세이지만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
 -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흑자 비율은 2000년대 들어 중반까지는 축소되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확대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상승하지만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유지

- 상품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초가 정착되면서 거시 경제의 안정성 확보
 -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9월 현재 67개월 흑자 행진을 이어옴
 - 상품 수출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었지만,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는 2000년 들어 적자를 지속
 - 경상수지 흑자 기초가 정착되면서 외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은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약화의 부작용이 있지만 거시 경제의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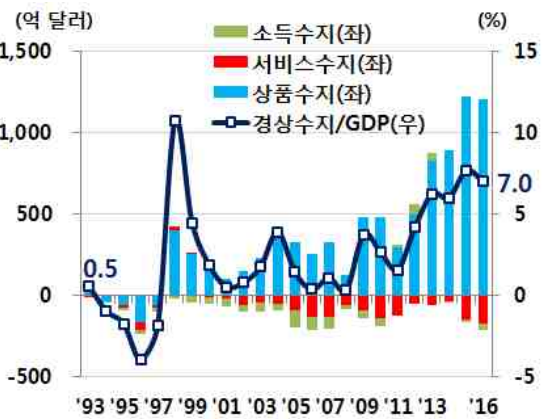
<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



자료 : IMF.

- 주1) 재정수지는 General Government Net Lending/Borrowing 기준.
- 주2) 정부부채는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기준.

< 경상수지 >



자료 : 한국은행.

- 주 : 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 + 본원소득수지.

- 2014년부터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외채 의존도가 하락하는 등 대외 채무의 구조도 개선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차감한 순금융자산은 2014년 842억 달러를 기록하며 순채권국 지위에 올랐으며 2015년 2,045억 달러, 2016년 2,785억 달러 등 규모가 확대됨
- 선박 수출 및 해외증권투자 관련 환헤지 수요 증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0%까지 상승했던 총대외채무 중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채무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 축소 조치 도입 이후 30% 이하로 하락

- 외환보유고 확충으로 대외 지불 능력 개선

- 외환위기 이전 300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고는 2016년말 현재 3,711억 달러로 약 12배 이상 증가
-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채무 비율은 1990년대 중반 150%에서 2016년 28.3%까지 축소
- 2선 외환보유고로 평가받고 있는 통화스와프는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과 체결되었으며 규모는 1,168억 달러 이상⁴⁾

< 대외채무 규모 및 구성 >

(단위 : 억 달러)

구분	1995년	2005년	2015년
대외채무	1,089.3	1,619.6	3,960.6
장기	575.7 (52.9%)	950.4 (58.7%)	2,917.4 (73.7%)
단기	513.6 (47.1%)	669.1 (41.3%)	1,043.1 (26.3%)
대외채무 /GDP	(19.6%)	(18.0%)	(28.6%)

자료 : 한국은행, IMF.

주 : 장기 및 단기의 괄호()는 대외채무 중 장기채무 및 단기채무 각각의 비중.

< 외환보유고 >



자료 : 한국은행.

4) 한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6년말 1,136억 달러였지만, 2017년 11월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가 없는 상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평가를 받음. 한국은행은 무제한 통화를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기 시 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규모를 정한다고 밝힘.

○ (금융 산업의 건전성 개선)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등 건전성 개선

- 2000년대 중반 이후 바젤 II·III 로 이어진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자본 적정성 개선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의미하는 기본자본비율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00년 들어 대폭 상승
- 자기자본규제 제도는 금융 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지표로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8%를 넘도록 권고⁵⁾

- 금융 당국은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여 은행의 외화 및 원화 유동성 비율은 100%를 상회

-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을 의미하는 외화 유동성 비율 및 원화부채 대비 원 화자산을 의미하는 원화 유동성 비율 모두 100%를 상회
- 한국은 대외 개방도가 높고 원화가 아직 국제화 되어있지 않아 외화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이유로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에 상 시 노출되어 있음
-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은행이 외화를 단기로 차입하여 국내에서 장 기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간 불일치’ 현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동성 개선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일반은행의 유동성비율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5) 한국은행, 2011년 3월, ‘금융리스크와 바젤III의 주요 내용’.

3. 과(過) : 구조적 취약성

- (한계에 봉착한 양적 성장)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세계 대비 한국의 경제 규모는 2%대에서 정체
 -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외형적인 경제 성장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 수준까지 하락
 - 외환위기(1993~1997년) 연평균 8.1%씩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 4.6%씩 성장했으며 2010년대(2011~2016년)에는 2.8%로 낮아짐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던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는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뭇
 - 1인당 국민소득과 세계 대비 한국의 경제 규모는 '2의 함정에 속박)
 - 1인당 국민소득(GNI)는 2007년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간 2만 달러대에 묶여 있음
 - 한국의 경제 규모(GDP)가 세계 경제 규모(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선을 넘지 못하고 있음

<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주 :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하평균 기준.

6)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3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pp13.

- 저출산 및 고령화 진전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 투입 둔화,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증가세 둔화 및 자본스톡 증가세 한계 봉착 등의 원인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⁷⁾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2000년)⁸⁾에서 고령사회(2017년)로는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26년)는 9년이 소요되어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되어 가고 있음⁹⁾
 - 자본스톡 증가세 둔화도 인구 고령화 등에 의한 저축률 하락과 주력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의한 성장성 및 수익성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잡기” 이후 “기술프론티어 도약” 단계에서 정체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삼극특허¹⁰⁾ 건수는 3,107건으로 일본(16,197건), 미국(14,211건), 독일(5,525건) 다음의 4위를 차지¹¹⁾
 - 기초 분야 및 미지의 영역에서 꾸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프론티어 도약에 한계를 가짐

< 잠재성장률 및 요소별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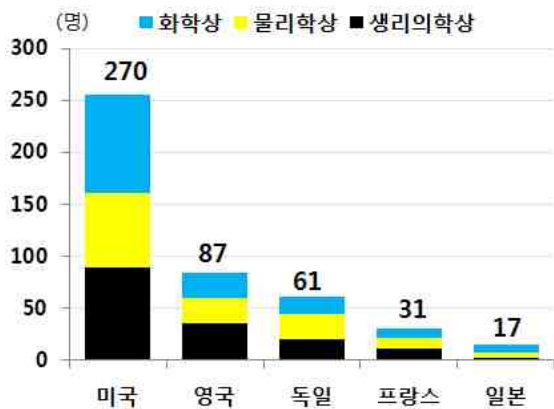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잠재 성장률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 생산성
1991~1995년	7.3	(1.0)	(4.0)	(2.4)
1996~2000년	5.6	(0.5)	(2.7)	(2.4)
2001~2005년	4.7	(0.2)	(2.0)	(2.5)
2006~2010년	3.9	(0.1)	(1.7)	(2.2)
2011~2015년	3.2	(0.1)	(1.5)	(1.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괄호()안은 투입 요소의 기여도.

< 노벨과학상 국적별 분포(1901~2017) >



자료 : 노벨상 홈페이지(nobelprize.com),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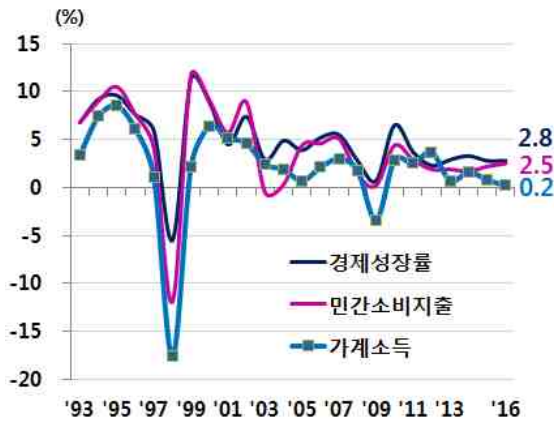
주 : 인문·사회분야(문학상, 경제학상, 평화상) 제외.

7)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1월,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경제주평 통권 676호.
 8)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9) 미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72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16년이 걸렸으며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11년이 소요.
 10) ‘삼극특허’는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돼 있는 특허.
 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

○ (취약해진 가계 경제) 저소득 지속 및 양극화 심화 등 가계 경제 취약

- 경제성장률 및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상황은 역전됨
 - 소비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계 소득이 더디게 증가하기 때문임. 가계의 경상소득¹²⁾ 증가율은 최근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0.2%까지 떨어짐¹³⁾
- 국민소득보다 느린 가계소득 증가, 또한 연금 및 사회보험지출 증가로 처분가능소득 증가 둔화 심각
 - 국민총소득(GNI)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3년 84.5%에서 2016년 81.4%로 축소
 - 2000년대 들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이 늘고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금 지출 부담도 늘어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며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 여력을 떨어뜨림¹⁴⁾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지출 및 가계소득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가계소득은 경상소득 기준.

< 소비부진 요인 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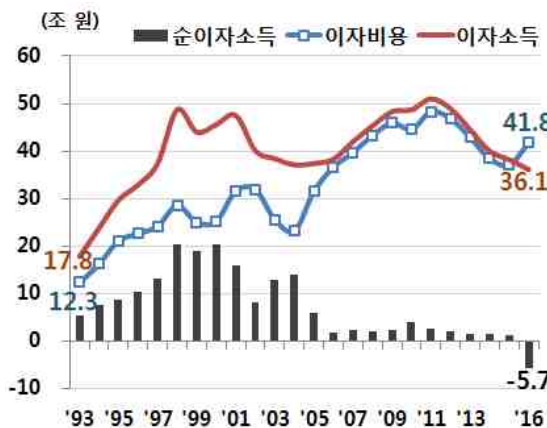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1) 명목자료.
주2) '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12) 경상소득은 비교적 장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가계가 예산을 세우고 지출 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임.
13)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10월,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14)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3월,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파급영향'.

- 가계부채 누증 및 순이자소득 감소 등 가계 경제가 부채의 덩어리에 빠짐
 - 가계신용은 2015~2016년간 과거 추세(2007~2014년의 연평균 60조원 증가)의 2배가 넘는 증가폭(2015~2016년간 연평균 129조원 증가)을 보이며 급증했으며, 2017년 3분기 현재 1,419조 원을 기록
 -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70%이고, 이 중에서 약 75%는 실제로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¹⁵⁾
 -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자소득도 증가하지만,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순이자소득이 대폭 축소
- 사교육비 등 가계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저축 및 실생활 용도의 소비 축소
 -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이 크며,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이 훨씬 큼¹⁶⁾
 - 한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커지기 시작하는 중고생 자녀를 둔 40대 가구주 가계의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비중은 1995년 8.7%에서 2016년 19.2%로 대폭 확대됨

< 가계 순이자소득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비중 >

(단위 : %)

구분	1995년	2005년	2016년
식료품	20.6	13.5	12.2
의류·신발	9.0	6.3	6.1
주거·수도·광열	8.8	9.1	9.1
교통·통신	11.8	18.1	16.0
오락·문화	6.6	5.7	6.1
교육	16.1	16.6	18.7
- 사교육	8.7	10.6	19.2

자료 : 통계청.

주1) 도시 2인 이상 가구 및 40대 가구주 기준

주2) 사교육은 가계동향 소비지출 항목 중 '학생학원교육' 항목.

15) 통계청, 2016년 12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6)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중은 5.9%로 OECD 평균인 5.2% 보다 높은 수준.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4.0%로 OECD 평균인 4.5%보다 작지만,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1.9%로 OECD 평균인 0.7%보다 큼(자료 : 교육부, 2016년 9월,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p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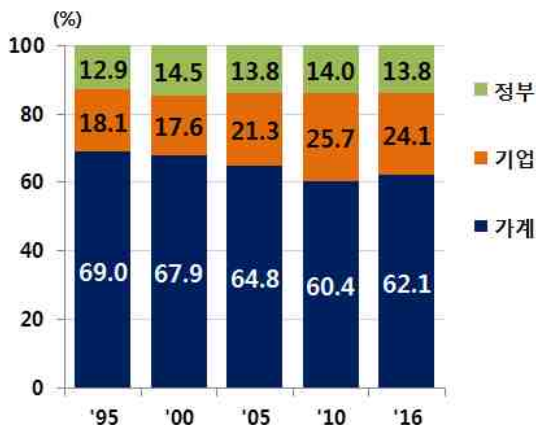
- 가계와 기업간 소득 분배 불균형 확대

- 한국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된 이윤이 가계 부문으로 유입되는 정도가 낮아지면서 기업-가계간 불균형이 확대됨
- 총국민소득(GNI) 중 기업 소득의 비중은 1995년 18.1%에서 2016년 24.1%로 확대된 반면, 가계 소득의 비중은 동기간 69.0%에서 62.1%로 축소
- 이러한 변화는 노동집약적 업종의 해외 이전이 증가한 반면, IT 산업 등 고용 창출력이 약한 장치 산업이 주력 업종으로 성장하면서 성장-고용-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

-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계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 심화

- 소득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1995년 35.1%에서 2016년 38.0%로 확대된 반면, 소득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동기간 9.1%에서 6.1%로 축소되어 소득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¹⁷⁾
-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로 1995~2016년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의 비중은 8.3%에서 15.4%로 2배 정도 확대되었고,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은 73.5%에서 64.8%로 저소득층이 확대된 만큼 축소됨
-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비중 축소로 경제 전체의 소비 규모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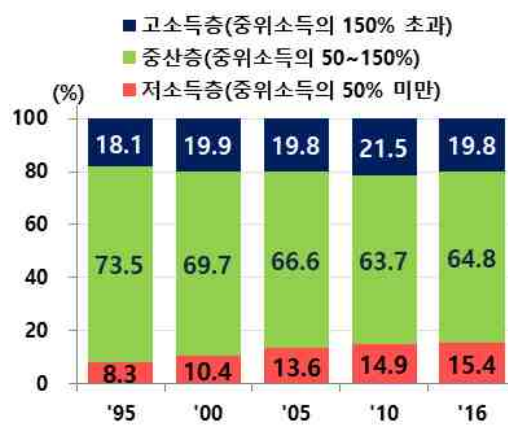
< 제도 부문별 소득/GNI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 : 기업은 금융법인 및 비금융법인 합산.

< 가계 소득 계층별 비중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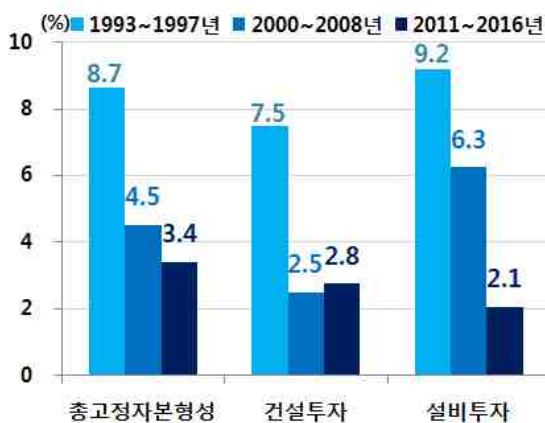
주 :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17) 자료 : 통계청(균등화 5분위 소득, 시장소득,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 (활력이 떨어진 투자) 저성장 진입 및 보수적인 투자 행태 등으로 고정투자 증가 속도 둔화

- 투자 부문 증가율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건설투자는 향후 인구 구조 변화 및 인프라 성숙 등으로 상당기간 둔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민간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절반 이하인 연평균 3.4%로 하락
 - 과거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업종들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기업개혁 및 정부규제 등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설비투자 증가율이 대폭 하락
 - 저출산·고령화 진행으로 주택 부문의 수요가 감소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성숙 등으로 향후 질적인 측면에서 보수·유지·개량 측면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는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외환위기 이후 GDP에서 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축소
 - 투자 부문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보면 건설투자는 1993년 22.0%에서 2016년 15.8%, 설비투자 비중은 동기간 12.4%에서 8.2%로 축소
 - 그러나 선진국 대비 건설투자의 GDP 비중이 높아 여전히 한국 경제 흐름은 건설업 경기 등락에 좌우되는 문제점 노출

< 고정투자 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주 : 총고정자본형성은 민간부문 기준.

< 투자 부문별 GDP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 : 총고정자본형성은 민간부문 기준.

- 대내외 수요 부진 및 저성장 진입으로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며 투자 유인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 비중이 2010년 3.3%에서 2014년 11.3%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¹⁸⁾
 - 제조업 부문의 설비 이용도를 나타내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0~2011년 약 80%에서 2016년 72.6%로 하락
- 외환위기를 겪으며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는 내실 경영과 보수적인 투자 행태 확산도 투자 둔화를 야기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은 부채규모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확충하는 등 내실 경영에 주력하고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장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1993년 294.9%에서 2016년 79.8%로 하락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동기간 94.1%에서 138.0%로 상승

< 설비투자 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설비투자 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 증가율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 제조업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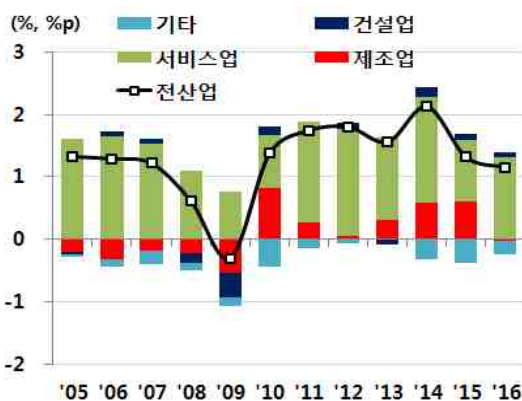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1) 부채비율 = 100*부채/자기자본.
 주2) 유동비율 = 100*유동자산/유동부채.

18)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0년 3.3%에서 2014년 11.3%로 크게 증가.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2010년 13조 350억 원까지 증가 후 2014년 3조 560억 원으로 감소(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3월,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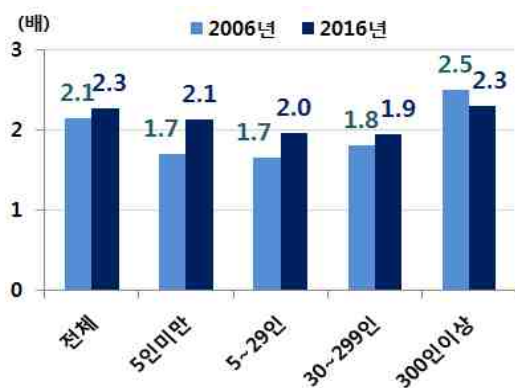
- (열악해진 고용 여건) 일자리 창출력 저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확대, 청년 실업률 상승, 고학력 실업자 확대 등 고용 여건 열악
 -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노동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고용 확대를 주도
 - 국내 노동 시장의 신규취업자수는 2011년 이후 둔화되면서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¹⁹⁾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비해 낮고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됨²⁰⁾
 - 또한 최근에는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고용 확대를 주도²¹⁾
 - 소규모 기업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 심화
 - 과거 10년간 정규직 임금/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대체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29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정규직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심화
 - 2006~2016년간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비율은 1.7배에서 2.1배, 5~29인 규모 사업장의 임금 비율은 1.7배에서 2.0배로 확대
 -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임금/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5배에서 2.3배로 축소

< 고용 증감률 및 산업별 기여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7년 9월,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 규모별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임금 비율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고용노동통계' 자료 이용).

주 :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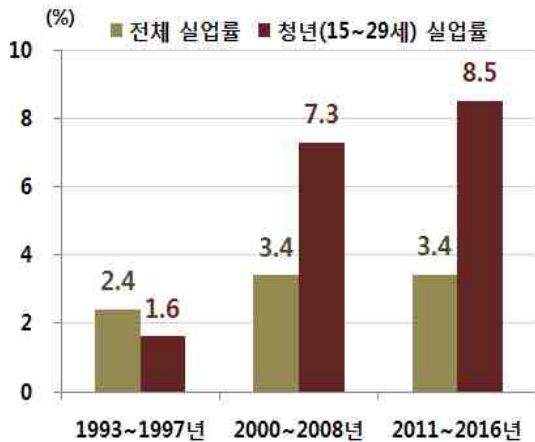
19)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3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pp84.

20)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4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21)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9월,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일자리와 학력간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고학력자 실업이 증가
 - 외환위기 이전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이러한 상황은 역전되었고, 상승폭도 전체 실업률 상승폭보다 더 커졌음
 - 2000년 들어 고졸 이하 실업자수는 감소세이지만 대졸 이상 실업자수는 증가세이며 총실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의 실업자수 비중은 확대
 -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학력자 실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숙련도를 가진 인력을 대학이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전체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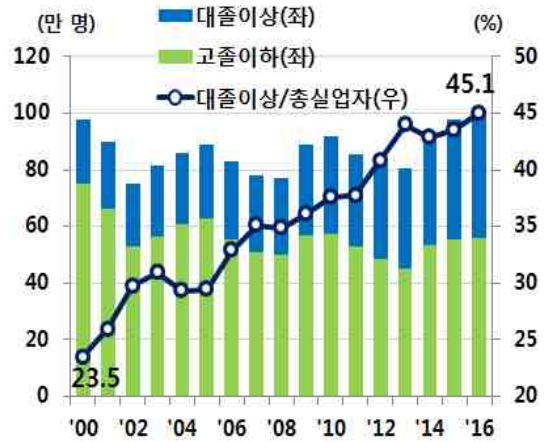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1) 기간중 연평균.

2) 2011~2016년은 구직기간 4주 기준,
나머지 연도는 구직기간 1주 기준.

< 학력별 실업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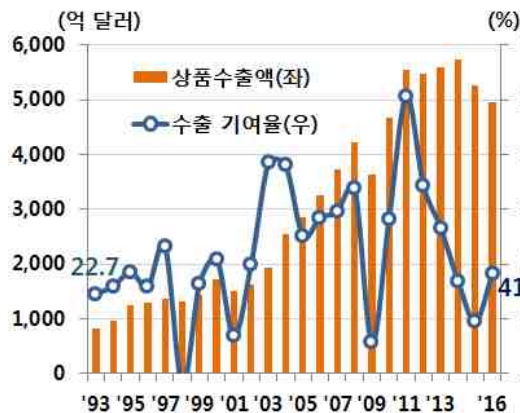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높아진 수출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축소되고 주요 수출품 및 수출 시장에 대한 높은 집중도 역시 지속

- 수출 의존도가 높아져 한국 경제 흐름이 대외 경기 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지향하는 WTO 체제 출범(1995년 1월)과 함께 한국의 수출 규모는 급증
 - 1990년대 1,000억 달러대였던 상품 수출액은 2010년 이후 5,00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

- GDP에 대한 수출 기여율은 1993~1998년 38.1%(연평균)에서 2000~2008년 84.2%(연평균), 2011~2016년 80.2%(연평균)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대외 경기 변동에 우리 경제 흐름이 크게 좌우됨
- 수출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소비 및 투자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소비와 투자보다 낮고, 1995~2014년간 하락 폭도 소비(0.054)와 투자(0.072)보다 큰 0.134로 나타남
 -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즉, 생산 과정에서 수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몫이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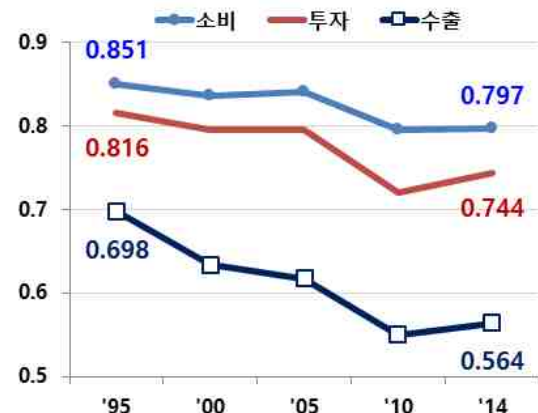
< 수출 규모 및 GDP에 대한 수출 기여율 >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1) 상품수출액은 명목자료.
- 2) 수출기여율은 상품 및 서비스 합산이며 실질자료 기준.

< 소비, 투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



자료 : 한국은행.

- 주요 수출품 및 수출 시장은 과거 20여년간 큰 변화가 없고 의존도가 높아 이들 산업 업황 및 수출 대상 국가들의 경기 등락에 크게 좌우
 - 1995~2015년간 총수출 중 7대 주력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에서 51.2%로 확대
 - 20여년 전과 동일하게 1, 2위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
 - 1995~2015년간 전 세계 수출 대상국 중 7대 주력 수출 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2.0%에서 60.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995년 7.3%에서 2015년 26.0%를 기록하는 등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었음
- 이는 그 동안 중국이 필요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 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 한국 수출도 연쇄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초래했음

< 총수출 중 7대 수출 품목 비중 >

	1995년	2005년	2015년
반도체	14.1%	반도체 10.5%	반도체 11.9%
자동차	6.7%	자동차 10.4%	자동차 8.6%
선박, 해양 구조물	4.5%	무선통신 기기 9.7%	선박, 해양 구조물 7.6%
인조장 섬유직물	4.3%	선박, 해양 구조물 6.2%	무선통신 기기 6.2%
영상기기	3.9%	석유제품 5.4%	석유제품 6.1%
전자응용 기기	3.8%	컴퓨터 5.0%	디스플레이 5.7%
컴퓨터	3.8%	합성수지 3.6%	자동차부품 5.1%

< 총수출 중 7대 수출 국가 비중 >

	1995년	2005년	2015년
미국	19.3%	중국 21.8%	중국 26.0%
일본	13.6%	미국 14.5%	미국 13.3%
홍콩	8.5%	일본 8.4%	홍콩 5.8%
중국	7.3%	홍콩 5.5%	베트남 5.3%
싱가포르	5.3%	대만 3.8%	일본 4.9%
독일	4.8%	독일 3.6%	싱가포르 2.8%
대만	3.1%	싱가포르 2.6%	인도 2.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1) 총수출 규모는 1995년 1,251억 달러, 2005년 2,844억 달러, 2015년 5,268억 달러.

2) 좌측 테이블의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 (불안정하고 실물 지원 미흡한 금융) 외환 시장 불안정성 확대, 은행산업 경쟁력 및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의 연결 고리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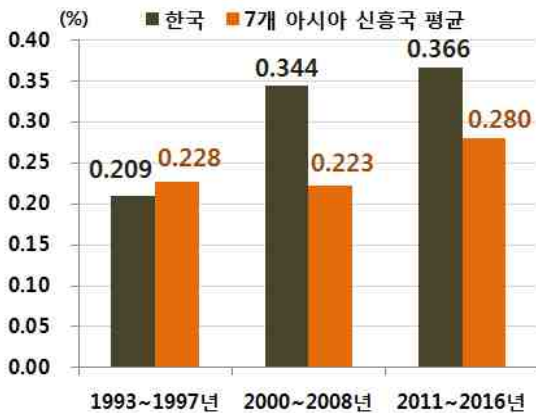
- 신흥국 통화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확대되는 원화 환율

- 전일 대비 절대값 변동률로 측정한 달러 대비 각국 통화 변동성을 보면, 원화 환율 변동성은 1993~1997년 평균 0.209%로서 7개 아시아 신흥국 통화 평균인 0.228%보다 낮았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자체도 높아졌고, 7개 아시아 신흥국 통화 변동성보다 더 높은 현상이 발생
- 이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이 많지만 아직까지 충격을 흡수할 능력은 취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경제 규모 대비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입 규모 비율은 주요 신흥국 비교 시 높은 수준

- GDP 대비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금 유출입(유입 + 유출) 규모 비율은 브릭스 국가와 비교시 남아공보다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보다 높음
- 국내 상장주식 중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1999년 10%내외에서 2017년 37% 내외로, 국내 상장채권 중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동기간 0.1% 수준에서 6% 내외로 확대

<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의 변동성 > < 주요 신흥국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금 유출입 규모 >



(단위 : GDP 대비 %)

	1994~1997년	2000~2008년	2011~2016년
남아공	4.8	4.3	5.1
멕시코	2.4	1.2	4.2
한국	3.2	3.9	3.6
태국	2.3	2.9	2.6
터키	0.9	1.8	2.5
인도네시아	1.6	1.3	1.9
브라질	3.9	1.1	1.5
러시아	3.1	1.7	1.1
중국	0.5	1.7	0.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Bloomberg 자료 이용).

- 1) 환율 변동성은 전일비 변동률 절대값의 기간 평균.
- 2) 7개 아시아 신흥국은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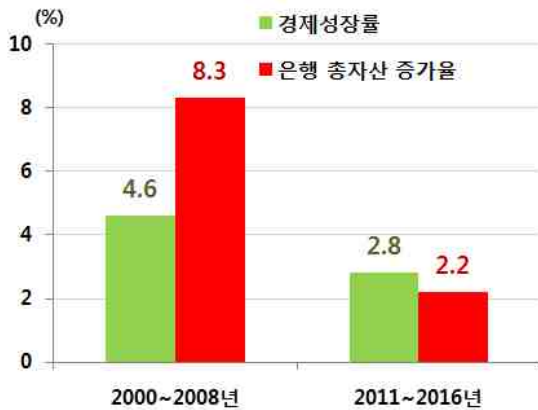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IMF 자료 이용).

- 1) 자본유출입 규모는 유입액 및 유출액 합계.
- 2) 기간 중 GDP 대비 유출입 규모 비율의 연평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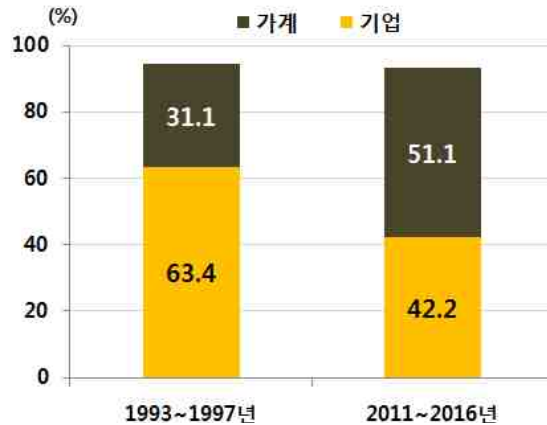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국내 은행의 경쟁력 약화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전에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던 국내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이 그 이후에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짐
- 이러한 배경에는 은행 사업 구조가 예대 업무를 주로 하는 특성상 실물경제 둔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
- 또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을 경험했던 국내은행이 2000년 이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임

< 국내 은행의 자산 증가율 >



< 국내 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은행 자산 증가율은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
 2) 기간 중 평균이며, 기하평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 기업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합산.

-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도 하락하는 등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의 연결 고리 약화
 - 국내 저축률²²⁾은 2000년대 들어 30% 초중반에서 등락하면서 최근에는 상승하며 2016년 35.8%를 기록
 - 국내총투자율²³⁾은 2000년대 들어 30% 초반에서 등락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하락하여 2016년 29.3%를 기록
 - 또한 수익성 및 건전성 등이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영 원칙이 강화된 은행들이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축소함²⁴⁾
 - 국내은행의 신용등급별 저신용자(6~10등급)의 비중은 2004년 27.9%였지만 2013년에는 16.6%로 11.3%p 축소된 반면, 그만큼 고신용자(1~5등급)의 비중은 확대됨
 - 저신용·저소득층이 금융 지원에서 소외될수록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금융채무증가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신용불량을 양산하면서 사회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

22) 총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23) 국내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이란 국내 경제주체들이 구입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즉,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에서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가를 더한 총자본형성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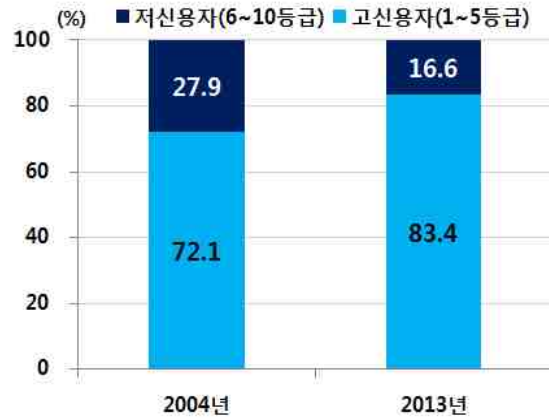
24)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10월,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과제'.

< 총저축률 및 국내총투자율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 은행의 신용 등급별 가계 대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4년 10월, '민간 서민 금융의 선순환 과제').

4. 시사점

- 새로운 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역동적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성장판 회복 노력과 경제 구조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인 자본 축적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지속
 - 기업과 개인,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프론티어 정신 확산이 필요함
- 향후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 출산율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 인력 유입책 등이 필요
 - 내수 시장의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 인력의 꾸준한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새로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산업 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 주력 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상시 구조조정이 필요함
 -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이 강조되고 혁신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지는 경제 구조가 요구됨
-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 성장과 환류가 가능한 '산업 및 기업의 생산, 투자 주도형' 성장 전략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음

둘째, 가계 저소득-고비용 구조 탈피, 고용시장 내 취약 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소비 활성화 정책의 발상 전환 등을 통해 내수 소비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소비 진작 방안 마련
 - 주거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를 제약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관련 대출 추세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가계부채의 축소 과정 및 안정적인 주택 가격 관리가 절실한 상황
 - 교육 재정 확충, 맞춤형 융자금 지원, 공교육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으로는 학력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의 진학 및 취업 분위기 형성이 필요함
- 실업 안전망 확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확대 등 취업 취약 계층 지원 확대
 - 실업 후 장기미취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 등을 확대하고 일자리 매칭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인 및 구직 기간을 단축해야 함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등 고용 조건 상에서의 차별 시정 및 비정규직 고용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소비성향이 높은 1인 가구, 규모 자체가 큰 고소득층의 소비 유도 등으로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전환 및 발상의 전환 필요

- 소비 진작책 타게팅을 소비 여력이 적고 소비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취약 계층으로 두는 점은 실효성이 적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임

셋째,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지속, R&D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부문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개방·융합·혁신형 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을 지속하여 성장의 주체인 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 규제 부문의 전반적인 선진화, 네거티브 규제로의 신속한 전환, 산업 정책의 유연화 등을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총력

- 규제의 양을 일단 줄이고 규제의 품질, 규제 개혁 과정에서의 민주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규제 개혁의 선진화 추진
-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효과는 극대화되는 반면 부작용을 최소화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먼저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사후에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규제 전환이 필요함
- 제조와 서비스로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제조의 서비스化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부터 응용 부문 개발, 업종별 플랫폼 육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이고도 유연한 산업 정책 마련

- 기업 입장에서든 전통 제조 부문에서의 자본 축적 지속, 기술 혁신 과정의 유연성 제고, 기술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 R&D 투자 활성화

- 여전히 한국의 강점은 제조 부문이고 빅데이터·AI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 발전도 제조업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음
- 다양한 산업군에서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엔드(High-End) 제품에 대한 비중을 제고해야 함
- 아이디어 창출, 채택, 연구개발 등으로 구성된 기술혁신 과정에서 관리 중심의 비용 절감과 함께 기술 중심의 혁신성 제고도 고려한 의사 결정 시스템이 요구됨

- 플랫폼 활용의 개방형 생태계 구축,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 신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개방·융합·혁신형 산업 생태계 조성

- 데이터를 생성·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 기술, 기업 간의 융합 촉진 및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 디지털 기반 기술 적용과 스마트화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인 기존 산업의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여 아직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
- 벤처 기업의 창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 제도, 세제, 인력 및 기술 등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넷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제고 및 수출 시장 다변화 지속 등의 부가가치 중심 무역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

- 고부가 및 고기술 중심의 수출 구조 재편이 시급

- 기초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생산을 확대
-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및 품질 경쟁력에 포커스를 둔 중간재 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이 증가해도 중간재 수입에 따르는 부가가치 유출을 방지

- 확대되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공략 지속, 성장 잠재력이 커지는 신흥 개도국 진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 지속

- 커지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간재 중심에서 최종 소비재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전환해야 함
- 소비재의 고급화, 중간재의 고기술화로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과 국내 공급사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신흥 개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지역 다변화는 특정 지역의 경기 부침 및 정치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르는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음.

따라서 인프라 개발 수요가 크고 내수 시장의 잠재력이 큰 신성장 지역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함

다섯째, 금융 부문의 핵심 역량 배양, 민간 서민금융 선순환 구조 강화 등의 금융의 경쟁력 강화 및 실물 경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
 - 최근 국내 금융 시스템은 생산 확대를 위한 기업대출보다는 자산투자 등을 위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금융의 본래 기능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미래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투자에 투입되고, 생산은 다시 고용과 소비 및 저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임
 -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금융이 미래 신성장동력과 주력산업을 육성, 더 나아가 경제 전체를 혁신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함

-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여 경제 내에서 금융소외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
 - 최근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고금리의 사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정책금융을 강화하여 금융소외자의 제도권 진입을 장려해야 함
 - 이를 통해 서민들의 정상적인 금융 소비를 돕는 한편, 기간 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 확대 등으로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함

【참고문헌】

- 1) 이규성, 2006년, 『한국의 외환위기 : 발생·극복·그 이후』, 박영사.
- 2) 교육부, 2016년 9월,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 3) 통계청, 2016년 12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
- 5) 한국은행, 2011년 3월, '금융리스크와 바젤III의 주요 내용'.
- 6) 현대경제연구원, 1998년 11월, 'IMF 시대 1년, 회고와 과제'.
- 7)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3월,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파급영향, 경제주평 통권 581호.
- 8)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4월,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VIP 리포트 통권 566호.
- 9)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10월,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과제'.
- 10)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1월,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경제주평 통권 676호.
- 11)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3월,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 12)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3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13)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9월,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경제주평 통권 763호.
- 14)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10월,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경제주평 통권 765호. **HRI**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오준범 선임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김수형 연구위원 (2072-6217, soohyung@hri.co.kr)